

머스크 “비트코인 결제 재개할 수도”… 잭 도시·우드 ‘옹호’

〈테슬라 최고경영자〉

“채굴에 재생에너지 50% 사용
테슬라, 비트코인 팔지 않았다”

잭 도시
“비트코인, 평화에 도움될길 희망”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 결제 재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여기에 비트코인에 대해 옹호 입장을 고수해온 잭 도시 트위터 CEO,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CEO까지 비트코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이들 세 명은 업계 리더 모임인 암호화폐혁신협의회(CCI)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컨퍼런스 ‘B 워드(The B word)’에 패널로 참석했다.



일론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뉴시스

당초 이들의 토론은 머스크와 도시의 비트코인 찬반 설전이 오갈 것으로 예측됐다. 일관되게 옹호 입장을 취해온 도시와는 달리 머스크는 최근 비트코인

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특히 머스크는 연초에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했었지만, 불과 한 달만에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더불어 비트

코인 채굴 과정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그러나 컨퍼런스에서 머스크는 테슬라의 결제 재허용 가능성 언급,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공개하면서 옹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날 머스크는 “(비트코인 채굴에)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50% 이상이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볼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다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으며, 개인적으로 전혀 팔지 않았다”라며 “스페이스X도 어떠한 비트코인도 팔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과 도지코인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잭 도시는 “내 희망은 비트코인이 세

계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세계 통화 체계를 바꾸는 것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그 변화는 비트코인과 함께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이 자체 통화를 만들 수 있다면 단연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우드는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지목하면서 긍정적 가능성을 강조했다. 금광업이나 기존 금융산업과 비교했을 때도 비트코인이 환경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3인의 지원에 힘입어 비트코인 가격은 반등에 성공했다. 가상화폐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한국시간) 기준 3만1929달러(약 367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20일 한때 3만달러 선이 붕괴됐었지만 이들의 긍정적 발언 등의 영향으로 반등했다는 분석이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미신고 영업 대응

금융위, 9월24일까지 신고 접수
“미신고댄 사이트접속 차단 등 조치”

금융당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외국에서 운영 중인 가상자산거래소라고 하더라도 자금세탁 등 불법영업시 피해가 국내에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아직까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중 신고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획득한 곳은 1곳도 없다. 사실상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 가상사업자가 모두 퇴출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2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가상사업자 27곳에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고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FIU는 이번에 통지받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특금법 6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칠 경우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국내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FIU 관계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营业을 하는 경우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로 불법영업을 할 수 없게 할 예정”이라며 “불법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형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인이 가장 많이 거래하고 있는 바이낸스도 퇴출 가능성이 커졌다. 바이낸스는 창평자오 CEO 등 중국인이 만든 중국계 거래소이지만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본사 소재지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바이낸스가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거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쪽방촌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쪽방촌을 방문해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반도체·배터리·백신 개발에 2조+ α 지원

홍남기 부총리, 3대 국가기술 설정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총 65개 핵심기술 개발에 2조원 이상 지원한다. 저탄소, 디지털 전환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등 세제 혜택도 준다. 또 기업의 사업 구조 개편에 대응해 노동자들이 직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의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에 오는 2023년까지 2조원+알파(α) 설비투자자금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이는 저탄소와 기후변화, 코로나19 비대면화 등 디지털 전환으로 국내 산업구조가 빠르게 바뀌면서 사업 재편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

다는 의도다.

우선 정부는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따라 선제적으로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업이 자산을 매각한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 재편 기업에 1000억원 규모 채권담보보증권(P-CBO) 보증을 지원하고, 5000억원 규모의 사업구조 개편 기업 전용 금융 지원도 신설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6일 발표될 2021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전환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석탄화력발전, 내연자동차 등 저탄소 정책으로 향후 일자리가 대체될 업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10만명 규모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실시한다.

사업주 훈련을 개편해 디지털 원격훈련 지원 비율도 5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올해 27만 6000명에서 연간 100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홍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홍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